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노동안전 종합대책

2025. 9. 15.

관계부처합동

순 서

I. 추진 배경	1
II. 현황 및 원인 진단	2
III. 추진 방향	5
IV. 추진 과제	6
1.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6
2. 안전 주체로서 노사의 역할·책무 확립	15
3. 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	20
4.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제재 수단 도입	23
V. 향후 계획	27

I. 추진 배경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

- 누구나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

▲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OECD 국가 중에서 사망 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 <7.17, 대통령>

□ 산업재해는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

- 중대재해는 노동자 개인의 생명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와 기업 신뢰도 하락 초래 등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
- * '24년 산재로 인한 경제손실액은 38조 원으로 국가 예산의 5.8%, 재해율 1%p 증가는 연간 1인당 노동생산성 383만 원 감소(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중대재해 감축 정책 노력에도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

- 사고사망만인율은 주요 선진국 대비 매우 높은 수준
- * (사고사망만인율) '21년 0.43‰ → '22년 0.43‰ → '23년 0.39‰ → '24년 0.39‰
- ** 주요 국가 사고사망만인율('23년): 일본 0.12, 독일 0.11, 미국 0.35, 영국 0.03
-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추락, 끼임 등)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대형 사고도 지속 → '산재공화국' 오명 여전

□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조적·근본적 원인 해결 필요

- 그간의 대책은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지 않은 채,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 진단함으로써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리는 데 한계
- 중대재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필요

- ❖ **고위험 현장**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모든 자원 집중
- ❖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동자는 보호의 객체에서 “**예방의 주체**”로 전환
- ❖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기업에는 “**확실한 책임**”을 부과

II. 현황 및 원인 진단

1. 중대재해 현황

□ 사고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크게 줄지 않는 상황

* (사고사망자) '22년 644명 → '23년 598명(△46명) → '24년 589명(△9명)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339명), 기본 안전 수칙 준수로 예방 가능한 추락·끼임·부딪힘 같은 재래형 사고가 전체 사망사고의 약 60% 차지
- 유해·위험요인이 많은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대기업·공공기관 등에서 사망사고 반복, 대형 사고(동시 2명 이상 사망)도 다수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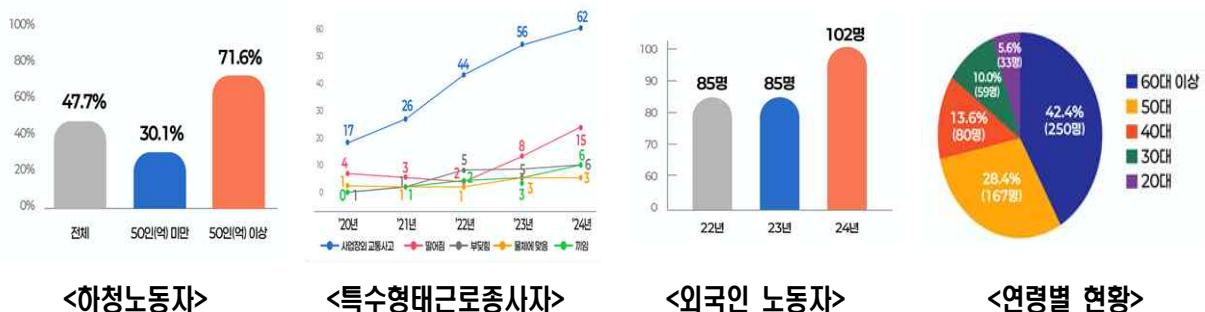


□ 하청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고령자 사고 다발('24년)

- 하청노동자 사고사망자(281명)는 전체 사고사망자(589명)의 48%, 50인(역) 이상 사업장은 하청노동자가 72%(250명 중 179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화물차주·퀵서비스 기사 등의 교통사고, 건설·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 사고사망 지속 증가<유족급여 승인 기준>

* ▲특고(명): ('22) 63 → ('23) 83 → ('24) 101 ▲외국인(명): ('22) 85 → ('23) 85 → ('24) 102

- 60세 이상 고령 사고사망자는 250명으로 전체의 42.4%,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발생 비중은 약 70% 수준(67.1%)



2. 원인 진단

□ 소규모 사업장 부족한 여력 · 한정된 행정력으로 정책 효과성 저하

- 소규모 사업장은 인력·재정 등이 부족해 노후 설비·불안전한 작업 방식 등 다양한 위험 상존
 - 공급자 중심의 재정지원*으로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 제고에 한계
 - * 사전 지정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지원 필요성 직접 입증, 과도한 신청 서류로 상당 시간 소요
- 중앙 정부 중심의 점검·감독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50인 미만)까지 행정력이 도달하기 어려운 구조
 - * 산업안전감독관 1,000여명,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200만 개소(전체 사업장의 98%)
 - 지방자치단체는 감독 권한·인력·예산 미비 등으로 사업장 점검·감독 등 예방 활동에 제약
- 형식적 안전 교육 등으로 안전 의식과 경각심 저하

현장의 목소리

“재정지원 품목이 한정되어 있고, 컨설팅 내용도 실제 현장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안전 교육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수했다는 서명만 받는 경우 많아요.”

□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안전 관리 책임 공백

- 고질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원·하청 간 책임이 불명확, 불법하도급 등으로 인해 안전 관리 비용 대폭 삭감
 - * (○○공사 사례) 당초 해체공사비는 3.3㎡당 28만 원, 불법재하도급 과정에서 당초의 16%인 4만 원에 시공
 - 재하도급 과정에서 하청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및 정보 제공 등 안전 의무 공백 초래
- 이익 주체와 책임 주체 간 괴리로 실질적인 안전 투자보다는 처벌 회피를 위한 서류 구비, 법률 컨설팅 등에 집중

현장 사례

· (○○ 맨홀사고) 가스농도 미측정 및 호흡용 보호구 미착용 등 재하도급 과정에서 안전 의무 공백 → 오수관로 측량 작업 중 3차 수급인 노동자 2명 질식 사망

□ 안전 주체로서 노동자 역할에 한계

- 원청 사업장 노사 중심의 안전·보건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함께 일하는 당사자인 하청노동자의 참여 제약 → 위험의 전가
-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 및 대피할 수 있는 소극적 권리만 보장, 부당한 처우를 받을 우려 등으로 실제 작업중지 사용 제한
- 사업장의 위험요인 및 개선 방안을 찾는 위험성평가 과정에도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이행 담보에 한계

현장 사례

· (○○ 현장) 화학물질 누출로 인해 노동자가 작업중지를 하였으나, 작업중지 요건(급박한 위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8년 소요

□ 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적은 구조

-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이 주로 소액의 벌금, 집행유예 등에 그치고 있어, 경제적 불이익은 미미
 -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집행유예 중심 판결(51건, 86.4%),
▲산업재해 발생 없이 점검·감독 중 적발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99.6%가 벌금형(평균 130만원)
-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양형기준 부재
- 안전보다는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공기 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 강행, 노후 설비·시설 등의 개선도 비용 부담으로 소극적
- 사업장 자율 개선과 시정조치를 우선하는 점검 확대 등으로 법 준수에 대한 인식 약화

현장의 목소리

“일부 현장에서는 위법 사항이 적발되어도 고치기만 하면, 처벌은 받지 않는다라는 인식으로 사전적인 안전조치에 소홀한 측면이 있어요.”

III. 추진 방향

기본 방향

- ▶ 영세사업장,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 지원 집중
- ▶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함께 예방 주체로 노력
- ▶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
 '30년까지 OECD 평균 사고사망만인율(0.29‰) 달성



예방 지원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 확대 2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 집중 지원 3 지방자치단체·민간과 함께 촘촘한 예방시스템 구축
	안전 주체로서 노사의 역할·책무 확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급 계약 시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 강화 2 공공기관이 안전에 선도적 역할 3 안전관리를 위한 구조 개선 4 산재예방주체로서 노동자 권리 보장
구조 개선	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안전감독관 대폭 확충 2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민간의 전문성 제고 3 안전 의식·문화 확산
제재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제재수단 도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속·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 부과 2 여신심사, 자본시장 평가 등에 반영 3 사고 조사·수사 강화

IV. 추진 과제

1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1.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 확대

재정	인력	기술	교육
10인 미만 사업장 + 스마트 안전장비 현장수요 맞춤형 지원	지역 산업단지 공동안전관리자 배치 및 교육 지원	중상해재해 재발방지 컨설팅 신설 및 사후지원 연계	대상별 맞춤형 교육 확대 및 교육 콘텐츠 제공
산재예방지원 2조 723억원('26년(안), +4,733억원)			

① 소규모 사업장, 현장 수요 중심으로 재정 지원 개편

□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 대폭 확대

- 10인 미만 사업장(50억 미만 건설 현장)의 추락·끼임·부딪힘 3대 사고 예방 지원 대폭 확대('26년(안) 433억 원 신설)
 -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품목 집중 지원, 지원 수준 향상

지원 품목	[추락]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일체식 작업 발판, 지붕안전대 부착설비 [끼임] 노후 컨베이어, 롤러기, 방호장치 [부딪힘] 신체감지센서 등 지게차, 크레인 등에 장착할 수 있는 충돌예방장치
지원 수준	소요 비용의 최대 90%(기존 50~80%)

- 안전관리 수준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기술지원과 연계 → 서류·절차 최소화하여 지원(Quick-pass) 확대('25년 8,000개소 → '26년 9,000개소)

□ **스마트 안전장비, 스마트공장 확산**

- 스마트 안전장비를 통한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자 안전 강화 및 재해 예방을 위해 지원 규모 및 자율품목 확대('26년(안) 370억 원)
 - 지게차·컨베이어 등 기계·설비에 인체감지센서 등 방호장치 단계적 의무화 검토(기술 안정성, 사업주 비용 부담 완화 방안 연계)

[재정지원 품목]



〈추락: 지붕 안전대 부착설비〉

〈끼임: 방호덮개〉

〈부딪힘:인체감지센서 장착 지게차〉

〈스마트: 세이프티 볼〉

- 자동화 설비·스마트 안전 장비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26년(안) 300억 원)

[부처협업형 산업안전 스마트공장]



□ **사업장 수요를 적극 반영한 사업 구조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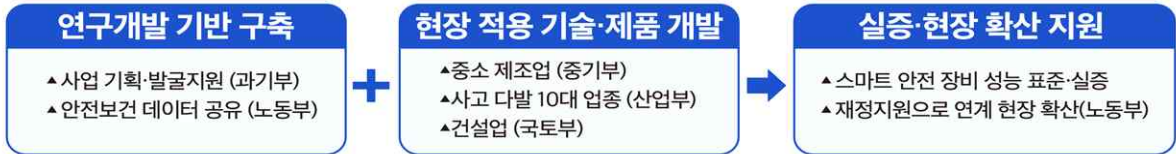
-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지정품목 중심의 공급자 편의적 지원에서, 실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체계로 개편
 - 수요가 많거나 공공기관 인증(S마크 등) 받은 시설·장비는 지원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지원
 - 재정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선지급 규모 확대(지원 금액의 70 → 80%), 산재예방시설 용자 규모·지원 확대(현재 구매만 지원 → 대여까지 확대)

	현행	개선
지원 체계	공급자 중심, 제한적 선택	수요자 중심, 자율적 선택
지원 품목	사전 지정 품목 중심	자율 품목 확대
심사 절차	투자계획 확인 및 심사	(인증, 검증 장비) 심사 절차 간소화
선지급 규모	지원 금액의 70%	지원 금액의 80%
산재 예방 시설용자	구매하여 보유하는 경우만 지원	+ 건설기계 대여(임차) 확대

2 AI 기술을 산업안전 분야에 적극 도입

□ R&D 사업 등을 통한 안전 기술 개발

- 다부처 협업 R&D로 안전분야 기술·제품 개발 → 현장 활용 확산



- 연구개발 확산을 위해 안전보건데이터(총 2,493종, 1,465억 개)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표준 개발(노동부, '26~'29)
- 업종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기술·제품 개발

업종	주요 내용
중소제조업	· 제조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산업재해 예방 장비·솔루션(안전센서, 웨어러블 장비 등) 공급을 위한 기술개발(R&D) 추진(중기부, '25~'28)
사고 다발	· 사고 다발 10대 업종별(배터리, 조선, 뿌리 등) 제조 현장의 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산업 AI 기반 제조안전시스템 개발·실증(산업부, '25~'28)
건설업	· 디지털화·자동화를 위한 기술 혁신 및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건설 쏘 주기 안전혁신 기술개발(R&D) 추진(국토부, '26~'30)

-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제품은 검증 과정(Test-bed)를 거쳐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노동부)으로 연계

□ AI 기술 활용 확산

- 중소기업장의 위험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위험요소 식별 및 개선 사항을 제시하는 AI 도구 개발(노동부)
 - * 사업장 정보(텍스트, 사진 등) 입력 → 위험요소 식별 → 개선 사항 제시 → 자체 관리에 활용
- AI·빅데이터 기반 고위험 사업장 선정 프로세스를 고도화하여 사업장 점검·감독 및 지원 등에 활용
- 끼임·추락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위험 분석 및 예방을 위한 AI·디지털 트윈* 기반 안전관리 서비스 실증 지원(과기부)
 - * 현실 환경을 가상공간에 구현, 실시간 데이터 연계 등을 통해 시뮬레이션 기반 분석·예측 수행
- 산단 내 IoT,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산업부)

3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기술 지원

□ 안전·보건관리자 확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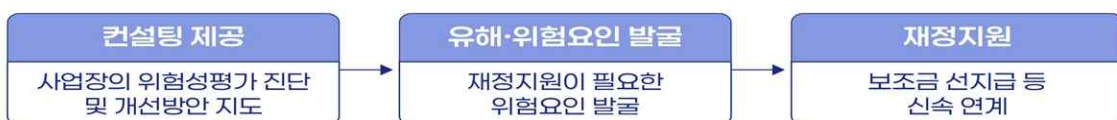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확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 (現) 50인 이상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부여(300인 미만은 외부 위탁 가능)
 - (改) 업종별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단계적 확대
-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 방안 신설 추진(선임 대상 확대 시행 시기와 연계)
 - 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 또는 민간 위탁 비용 지원 검토
 - 현장 경험을 갖춘 인력(5년 이상 경력)을 자체 선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 지속(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 안전관리자 자격이 없더라도, 양성교육 이수 시 안전관리자 자격 부여('28년까지만 실시 예정)

□ 지역산업단지 등에 공동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 업종별 협·단체, 노·사단체, 산업단지 내 관리주체와 협업, 자부담 비율 축소를 통한 공동안전관리자* 채용 확대 및 현장 지원 강화
 - * 업종별 협·단체 등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안전관리자 채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에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지원
-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업종·공정·단계별) 신규 운영으로 역량 강화 지원

□ 선제적 기술지원·사후지원과 연계

- 기존 사고사망 중점 관리에 더해 영구 후유장애, 사고사망 전이 위험이 큰 중상해재해(요양 기간 90일 초과) 발생 사업장 기술지원 도입
 - * 사고사망 발생 이전 3년간 중상해 재해가 발생했던 사업장 비율 37.6%('24년 사고사망 기준)
 - 해당 사업장 신속 현장 방문,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활동을 지원하는 선제적 컨설팅 신설('26년 8천개소)
- 취약사업장 컨설팅으로 파악된 위험요인이 실제 개선되도록 고위험 사업장 대상 이행 점검 확대, 재정지원과 연계



4 안전 의식 생활화를 위한 안전보건 교육 확대·지원

□ 안전 의식 생활화를 위한 안전보건 교육 확대·지원

- 생명안전 인지도·감수성 제고를 위한 대상별 안전 교육 확대

대상	주요 내용
공공	· 공무원(중앙-지방)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 이수 의무화
외국인	· 모국어·쉬운 한국어 기반 기초 안전교육 온라인 과정 운영, 전용 앱으로 번역 자료 보급 +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연계 산업안전 VR 체험시설 설치·운영('25년 9개 센터 설치)
사업주	· CEO·재직자 대상 소 교육 과정(중소기업연수원 6개소)에 산업안전(유형별 위험요인, 핵심 안전수칙 등) 필수 주의사항 사전교육 실시(年 6만명) + 찾아가는 교육 확대
학생	· 직업계고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제공, 학생 특화 기초 안전 이력서 교육과정 개설, 일반고(또는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활용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제공

□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콘텐츠 제공

- 실제 체험이 어려운 위험 상황(추락, 끼임 등) 및 작업공정을 재현한 VR 교육 자료, 특별교육 동영상 제작·배포
 - 사업장 및 교육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솟폼, 위험요인별 교육 콘텐츠 등 수용도 높은 콘텐츠 개발·보급
- 체험 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공공 안전체험 교육장(現 4개소)·국민안전체험관(現 2개소) 추가 설립 추진
 - * (예시) 교육시간 2배 인정, 체험 교육 콘텐츠 무상 제공, 우수 체험 교육장 포상 등

5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안전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 (現) 건물·구축물, 비품, 운송구는 세액공제 미적용 원칙이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안전시설은 허용 → (改) 조세특례제한법상 허용되는 안전시설 범위 확대
- 노사단체·유관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산재예방 우수 기업 발굴·선정 → 모범 사례 확산
 - * (예시) 기업재해경감 우수기업(행안부),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경기도)
 - 우수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근로감독 면제, 정부포상 시 가점, 정책금융 금리·한도 우대, 정책지원 시 가점 등 혜택 제공

2.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 집중 지원

①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한 강화 + 외국인 안전리더 확산

□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 요건 강화

-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전부 3년간 고용 제한*,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은 1년간 고용 제한 적용

* 사고 예방 조치 등을 심사하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검토

고용 제한 기준	현행	개선
1년	산재 사망사고 발생	사망 이외 외국인 중대재해 포함 * 3개월 이상 요양자 2명 이상 발생 재해 등
3년	산재 사망사고+ 500만 원 이상 벌금 확정	외국인 산재 사망사고 발생

- 건설업 고용 제한 단위를 '현장 → 사업주 단위'로 변경해 산업 재해 발생, 불법체류자 고용 시 제재의 실효성 제고

* 고용허가 단위도 사업주 단위로 일치시켜 외국인노동자 현장 간 이동 원활화(유예기간 부여)

□ 외국인 안전리더 확산

-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외국인 안전리더' 확산 ('26년 200명) → 외국어 안전 교육 제공 및 작업 노하우 등 전수
- * 외국인 안전리더: 장기 근속 외국인 노동자 등을 지정하여, 안전교육 강사 신규 외국인 노동자 멘토링 등 제공
- 외국인 안전리더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신규 고용허가 선정 시 가점 등), 안전리더는 활동 수당 지급 및 역량 강화 교육 제공

□ 주거 환경 개선

- 노동부-지자체 협업, 농촌 중심 주거환경 시설 정비 및 숙소지원 확대
 - 사업장 정보 제공(노동부)-숙소 점검(지방자치단체) 통해 불법 가설 건축물 등 취약 숙소에 엄정 대응, 건축물의 위험성 인식 확산

□ 현장 여건을 고려한 훈련 과정 운영

- 외국인 노동자의 직무안전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말에 참여할 수 있는 직업훈련 운영 지원(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 훈련기관 등 협업)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의 보호 범위 확대 + 교통사고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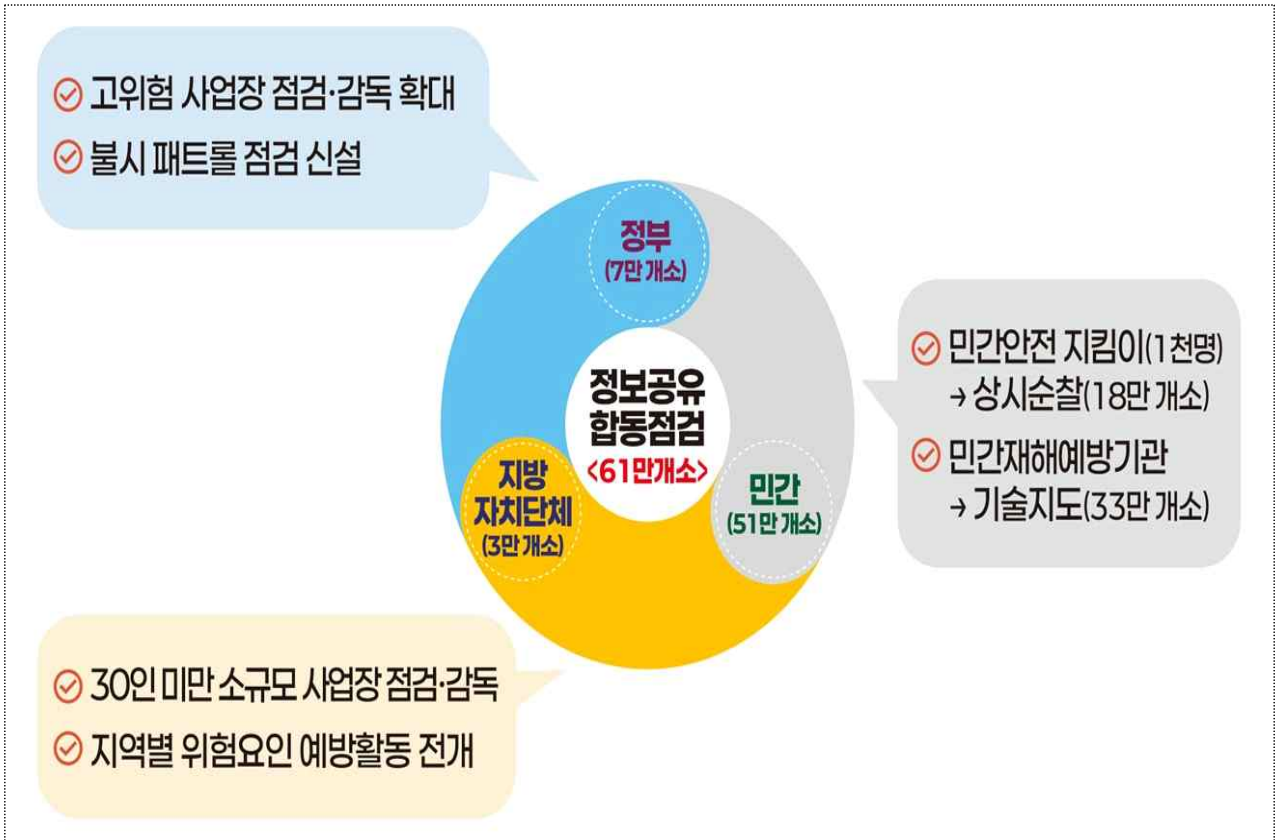
-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現 14개 직종) 및 적용되는 규정 확대 등 보호조치 강화(산업안전보건법)
 -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택배업 위탁 계약 시 표준계약서의 주요 사항* 반영 의무화(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 계약기간, 위탁 지역, 위탁 업무, 수수료, 손해배상, 당사자 준수사항 등
- 산안법 상 안전조치* 준수 점검 확대, 노후 이륜차 무상 정비, 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 등 지원
 - *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모 착용, 이륜차 정비 상태 확인, 비정상적인 이륜차 탑승 금지 지시 등
 - 이륜차 교통 위반 집중 단속(안전모 미착용, 과속, 신호위반, 불법유턴 등) + 후면 카메라·안내 표지판 등 단속 시설 확충
- 야간·택배 작업 등 고위험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도입 추진(산업안전보건법)
- 배달종사자에 대한 유상운송보험 가입, 안전교육 의무화 등 사회안전망 조치 강화(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7대 배달 플랫폼 운영사와 협의 채널을 만들고 배달 노동 실태조사 착수('25.9월~)

③ 고령노동자: 특화 작업환경 개선, 교육·건강관리 강화

- 고령노동자 친화적 작업환경 개선* 비용 지원('26년(안) 30억 원)
 - * 문턱 제거, 난간 설치, LED 조명 확보, 단순한 문구를 큰 글씨로 제작, 이중 위험 경보기 설치 등
 - 고령노동자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반영한 특화 컨설팅·기술지도
- 건설·청소·경비·시설관리 등 고령노동자 다수 고용 업종·직종별 작업 시 유의 사항 등이 포함된 작업관리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 고령자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지시할 때 사업주 고려 사항, ▲작업시간, ▲작업 속도, ▲신체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조치, ▲조도 소음 등 작업환경, ▲건강관리 등
- 고령노동자 다수 종사 유관기관(노인인력개발원 등)과 협업하여 특화 콘텐츠 개발·보급 및 안전보건교육 확대 실시(年 5만 명)
- 뇌심혈관질환 등 고령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심층건강진단 및 사후관리(건강상담 등) 지원

3. 지방자치단체 · 민간과 함께 촘촘한 예방시스템 구축



1. 중앙정부 : 고위험 사업장 점검 · 감독 확대 (7만개소)

- 감독관 증원과 연계하여 감독 물량 대폭 확대('25년 2.4만 → '26년 5만 → '28년 7만개소)하여 사각지대 해소
 - 단순 점검(시정조치 우선) 보다 감독 비중 확대, 위반 시 법에 따라 즉시 집행
- 신속 대응을 위한 불시 패트롤 점검 신설, 「안전일터 신고센터」와 연계해 즉시 확인 및 개선지도 체계 구축
 - 계절·주요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의 날(매월 2·4주 수요일)을 통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안전보건공단 일제 점검 실시
 - ▲ (계절) 폭염, 한파, 미세먼지, ▲ (위험 요인) 추락, 끼임, 부딪힘 등
- 복합 문제 사업장(예: 불법과전+ 중대재해)은 합동 감독(산업안전+ 근로기준)으로 근로시간·형태·안전 조치 등 현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 파악·개선

② 지방자치단체: 30인 미만 점검·감독 (3만개소) + 지역 특화 예방

- 감독 권한 위임 및 산업안전감독관 증원과 연계하여,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점검·감독 추진('28년까지 3만개소 목표)
-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 사업 기획·운영토록 사업 신설('26년(안) 143억 원)
 - 지붕공사, 별목작업 등 지역별 산재 다발 위험요인에 집중 대응
 - 대상별(고령자, 외국인 등) 다양한 특화 예방사업을 통해 지역 내 산재발생 감소 → 경기도 등 우수 자치단체 모델 전국 확산 유도

* (예시) ▲지역 특화 산재예방 사업(축사, 상·하수도 맨홀 작업, 농·임·어업 관련 안전보건 지도·점검 등)
- 중앙-지방 안전 네트워크 구축으로 발주 공사 및 취약 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 작업 정보 공유, 유관기관 합동 점검 등 개별 관리 강화
 -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예시: 맨홀 작업 등) 작업계획 등 정보 공유를 통해 안전성 확보 후 작업 실시

③ 민간: 영세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상시 순찰 (51만개소)

- 역량·경험이 있는 민간·공공분야 퇴직자, 노사단체 소속 인원 등을 안전지킴이로 채용·위촉(1천명, '26년) → 영세사업장(18만개소) 집중 투입
 - * (예시) 소장, 건설업 안전관리자 등 경력자를 채용하여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1억 원 미만 초소형 건설 현장 등 집중 점검
-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재해 유형*에 대해서는 민간재해예방기관(現 2,124개소)을 통해 집중 지도·관리 강화(33만개소)
 - * 영세 축사, 공장 지붕 유지보수 등 추락 다발 공사 등
- 종합적인 기술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방노동관서-대한산업안전협회-대한산업보건협회 협조 체계(핫라인) 구축하여 영세사업장 관리 강화
 - 중대한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즉시 통보하여 감독 실시, 개선 필요 시 재정지원·종합 기술지원(안전+보건)으로 연계

❖ 지방노동관서-지방자치단체-민간 협업체계 구축(협의 정례화) → 정보공유, 합동점검

2

안전 주체로서 노사의 역할 · 책무 확립

1. 도급 계약 시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 강화

① 안전 관리를 충분히 할수 있도록 **적정 비용 보장**

- 건설 현장 품질·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공공·민간)에게 공사 규모·특성 등을 고려한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 부여(건설기술진흥법, 건설안전특별법)
 - 중소건설사의 적정공사비 확보와 현장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적격심사(국가 공사 100억 원 미만) 낙찰하한율 상향(+2%p)
- 하도급사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주체를 발주자에서 원청까지 확대(산업안전보건법)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 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 금액에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 부정사용 등에 대한 점검·감독을 강화하고, 효과 분석·노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단계적 인상(계상 요율) 검토
 - 조선업 등 타업종에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확대
- 산업안전비용 전가 부당특약 집중 점검(노동부, 공정위 등),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 상향*(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 * 과징금 산정요소인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표 상향 中(2점) → 上(3점)

②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공사기간 부여**

- 민간 공사 설계서에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시켜 계약 단계에서부터 적정 공기 확보 유도(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 * 現 공공·민간 모두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가 있으나, 민간공사는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 부재
 - 발주자가 적정 공기를 산정하고, 전문기관, 인·허가기관의 장이 심의·검토하는 방안 도입(건설안전특별법 제정)
- 폭염 시 노동자 보호를 위해 건설 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폭염 등 기상재해 추가 추진(산업안전보건법)

2. 공공기관이 안전에 선도적 역할

① 인력·투자 확대 등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성 강화

- 안전경영 원칙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기관별 2인 1조가 필요한 위험작업, 6개월 미만 신규자 단독 금지작업 운영 실태조사 → 부실 기관 개선 조치 및 안전 관리 등급 심사에 반영
 - 재난·안전 관리, 고위험 현장 인력(2인 1조 등) 우선 재배치·증원 추진
- 노후 시설·장비 교체, 신기술 안전 장비 도입 등에 대한 투자 계획 작성, 기관별 안전 투자 실적 주기적 점검·관리(주요 기관, 분기별)
- 기관장·경영진, 수급업체 사업주·현장관리자, 현장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

② 공공기관 및 수급업체 포함 안전 관리 평가

-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재부)에 기관장 안전 경영 책임을 주요 사항으로 반영, 산재예방 분야의 배점(현재 0.5점) 대폭 상향
 - 공공기관 사고사망자 비중이 가장 높은 건설현장에 대한 심사 확대(안전관리등급제 건설현장 現 28개 → 40개 이상 확대)
- 공공 부문에서부터 원칙으로서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에 안전 가점 신설하여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 등 반영
 - 공공기관 재난관리 평가(행안부)에 도급사업 관련 안전 관리 항목* 신설,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잠정)에 '협력사 안전관리' 포함
 - *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합동 안전보건 점검, 안전보건 정보 제공 등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노동부)는 중대재해 반복 시 평가점수 대폭 감점(50%), 발주현장 근로자 면담 신설
 - **全 기관 평가 등급(S~E) 공표** → 기관 차원의 주의·경각심 제고
 - * '23년까지 미공표, '24년부터 우수 등급(S, A등급) 기관만 공표
- 지방공기업에 대한 안전활동 수준 평가 도입·확대(現 17개소 시범 운영)

3. 안전 관리를 위한 구조 개선

1] 불법하도급 방지 등 하도급 구조 개선

-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정례화(국토부, 노동부 등)
→ 적발 시 벌점,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
- 불법하도급에 따른 제재 수준 및 사유 등 확대(건설산업기본법)
 - * 불법하도급에 따른 인명사고 발생 시 등록 말소 기준 강화(現 5년 내 3회 이상)
주체별(원수급인·하수급인) 책무 확대, 위반 시 행정처분·벌칙 수준 강화 검토 등
- 6개 분야 공공기관(발전, 에너지, 공항 등) 하도급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하도급 개선 방안 마련(관계부처 합동)
- 공공부문에서 질식 위험업무의 하도급 제한(산재예방 조치가 가능한 사업자로 한정)을 위해 관련 규정 정비
 - * 공공부문 계약 시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등에 질식 위험 업무 수급인(하도급 포함)의 필수요건(장비·인력) 우선 반영(행안부·기재부 협조), 관련 규정 정비 추진

2] 적격수급인 선정 등 주체별 안전 관리 강화

- 산재예방능력을 갖춘 적격한 수급인을 선정·계약토록 의무 내용·절차 명확화* → 위반 시 실질적 제재 병행(산업안전보건법)
 - * (예시) 수급업체의 직전 3년 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 및 시정 여부 확인
- '적격 수급인 선정 가이드라인' 개정·보완도 병행
- 건설공사 쉼 과정 주체별 안전보건 책임·역량 강화(노동부, 국토부)
 - 사업주(시공자) 외에 발주자, 설계자·감리자 등의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 신설·강화 등 법 제·개정 및 제도 개선

4. 산재예방주체로서 노동자 권리 보장

① 알 권리: 정보 공개 확대 및 위험성평가 개선

□ 사고 정보 공개 확대

- 사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재해발생 경위, 기술적 원인 등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산업안전보건법)
 - 既 조사된 재해 중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 시행 이전에 보고서 공개
-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 마련(예시: 반기)

□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신설

- 재해 현황·재발방지대책,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투자 등을 공시토록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하여 안전보건 정보 공개 확대(산업안전보건법)
 - *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예정
- 공공기관의 산재 사망자 수 공시 주기 확대(年 1회 승인 기준 → 분기별 발생 기준),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부상자 수' 공시 항목 신설
 -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시 공시

□ 위험성평가 현장 작동성 강화

- 중대재해 다발 업종의 위험성평가 표준모델, 고위험요인 자료 등 보급, 지역 산업단지 영세업체 대상 합동 교육·컨설팅 지원
- 위험성평가 미실시 및 필수 절차 누락 시 벌칙 적용, 해당 작업·공정 노동자 참여, 결과 공유 의무화 및 노동자대표 참여 보장(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필수 절차]



② 참여 권리: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 및 노동자대표 권한 강화

- 개별 사업장 노사만 참여하였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노사도 함께 참여토록 확대(산업안전보건법)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
- 공공기관, 사내 하청이 있는 50인 이상 조선·철강·자동차 등에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
- 원·하청 노사가 자체 안전규범 수립, 노사 모두 성실 이행 책임·의무 부담
- 건설업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의무 범위 확대 (120억 이상 → 50억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노동자대표 추천 시 소속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및 교육 훈련 지원(산업안전보건법)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 소속 사업장 특별 감독 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참여 의무화, 작업중지 및 시정조치 요구권 부여
- 사업장 감독·점검 시 안전보건 전문성(실무경력, 자격 등)을 갖춘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등 소속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참여 추진

③ 피할 권리: 작업중지권 확대 및 실질적 보장

- 노동자가 직접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 요구 권리 신설, 노동자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산업안전보건법)
 - * (現)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改)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유해·위험 발생 농후 시)가 있는 경우
-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 시 불리한 처우(부당해고, 징계 등)를 받은 경우 형사처벌 신설 및 법적 구제 절차 명확화(산업안전보건법)

3

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

1. 산업안전감독관 대폭 확충

① 지방자치단체 권한 위임 및 인력 확충

-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한을 부여*하고, 감독관 인력 확충 및 사업장 점검·감독 시 협업 강화

* (범위)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예방적 감독 수행, (권한) ①사업장 감독, ②사후조치 권한(사법경찰권)

- 「^{가칭}근로감독관 직무 및 사무 위임에 관한 법률」 제정, 매뉴얼 마련 등 전국적·통일적 집행 기준 마련

- 감독·수사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감독관 대폭 충원 (‘28년까지 중앙 + 지방자치단체 약 3,000여명 증원 목표)

- 중앙·지방 감독관 인력보강과 연계하여 점검·감독 물량 지속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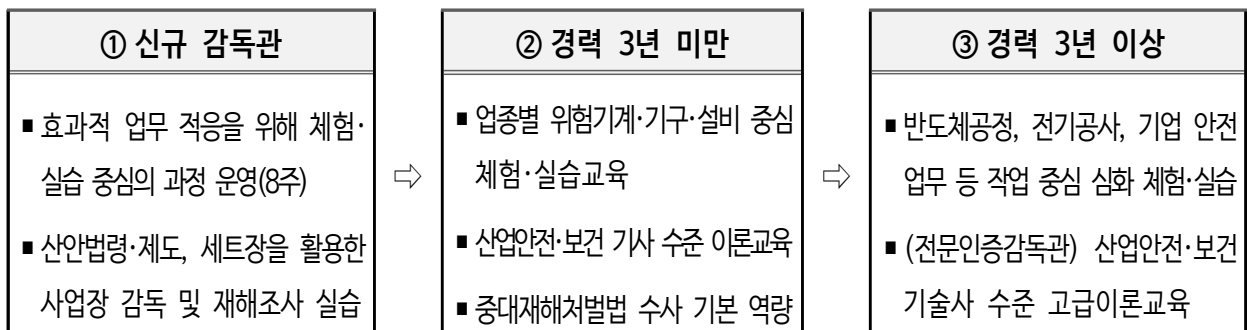
② 감독관 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형 교육 및 보직 관리

-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술직군 채용 확대(現 43% → 70%)

- 직무능력이 탁월한 인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직무능력 공인 전문인증제 도입(승진 시 가산점 부여), 순환보직 제한

- 임용 직후부터 촘촘한 멘토링과 체계적 도제식 훈련 실시, 경력 단계에 맞춰 현장 중심의 체험·실습형 교육 강화

[산업안전감독관 역량 교육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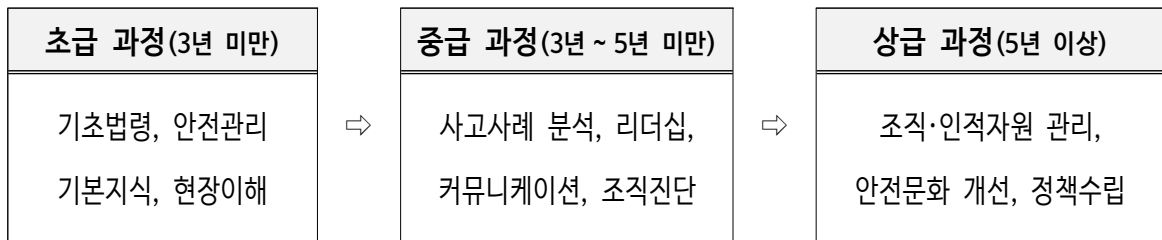


2.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민간의 전문성 제고

① 안전·보건관리자 전문성 제고

- 현장 경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경력별(초급, 중급, 상급) 직무교육 실시, 이수증 발급 → 안전·보건관리자의 경력관리 유도

[안전·보건관리자 경력 관리]



- 최신기술 등에 대한 전문교육 및 고위험 사업장에 종사하는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업종별 안전 관리 사항 등 특화교육 운영

② 민간 재해예방기관 역량 강화

- 低 역량기관, 신규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기술지도 방법, 기관 운영 방향 등 컨설팅 지원 → 우수 기관 육성
- 위탁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 등 현장 기술지도 충실성 중심 평가, 등급 공개 방식 효율화 등 평가 체계 고도화
 - 부실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및 위탁 사업장 병행 점검, 정부 사업 참여 배제 등 제재 강화로 시장에서 퇴출 유도

③ 건설인 기능인 등급제를 통한 숙련 기능인 양성

- 시공능력 평가·입낙찰 시 기능등급인 고용실적·고용평가 등을 반영하여 기능인등급제 활성화, 안정적 고용 여건을 마련을 통한 청년 유입 유도

3. 안전 인식 · 문화 확산

① 대국민 직접 위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안전 생활화를 위한 온라인·모바일 기반 「안전일터 신고센터」 개설·운영(8.29.~, 안전신문고 등과 연계)
 - 신고된 사업장은 즉시 확인을 통해 위험 요인 개선 지도



· 건설 현장에서 고소작업 중 안전띠·안전고리 미체결로 추락 위험 신고(9.4.)
 ☞ 현장 출동하여 ▲추락망 설치 후 보고, ▲안전 조치 철저히 할 것을 지도

- 산재 발생 위험 등 적발·신고 시 포상금 지급('26년(안) 111억 원)
 - ①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②산재은폐·정부명령에 대한 고의적인 미이행 신고 시 파격적으로 포상
 - 중대한 사고 예방에 기여한 신고 사항은 추가적인 포상

[포상금 지급(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방호설비 미준수 등): 1건 당 50만 원
 ▲고의적인 법 위반(산재은폐, 정부명령 미이행 등): 1건 당 500만 원

② 안전 인식 확산을 위한 민관 협업

-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 등과 협력하여, 자발적인 안전 투자 확대 및 안전 확보 노력 촉구
 - 정부,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기업 안전문화 확산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경영진 인식 제고 활동 전개
 - 경제단체(경총) 및 업종별 협·단체로 구성된 「제조안전 얼라이언스 협의체」 발족(10월) 및 분기별 정례화
 - * 경총 및 8개 제조업종별 협단체로 구성(반도체·철강·뿌리·석유화학 등) → 업종 지속 확대('26~)
- 노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안전문화 협의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안전문화 활동* 추진
 - * (예시) 위험표지판 부착, 외국인 노동자 산재예방 특화 활동 등
- 대국민 안전 인식 확산을 위한 공익 광고 등 다양한 매체 활용

4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제재 수단 도입

1. 신속·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 부과

① 중대재해 반복 발생 시 금전적 제재 및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 다수 사고 발생에 대한 과징금 신설

-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예시: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 원) 도입(산업안전보건법)
 - * 사망자 수·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 과징금 심사위원회 신설
-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
- 전문가 논의,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과징금 부과 대상·금액·절차 등 구체적 방안 마련

□ 영업정지 대상 확대

-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도 추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요청 대상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건설사 등 포함(전기공사사업법,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소방시설공사사업법, 국가유산수리법, 산안법 시행규칙)
-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現 2~5개월) 강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 (現) ▲2~ 5명 (3개월) ▲6~9명 (4개월) ▲10명 이상 (5개월)

□ 사고 재발 시 인허가 취소 등 추진

- 최근 3년 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 발생 건설사의 등록말소 요청 규정 신설(산업안전보건법)
 - 노동부 요청 시 건설업 등록 말소 가능토록 명확화*(건설산업기본법)
 - * 등록말소 사유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말소를 요청한 경우」를 추가
- 법률 전수조사를 통해 건설업 외 업종에서도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11개 부처 33개 법률 대상 검토, 법제처)
 - * 세무정보 활용, 현장 단속 강화 등을 추진하여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 방지

②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 공공입찰 제한 강화

□ 공공입찰 참가 제한

-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까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 입찰 참가 제한 요건을 중대재해 반복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 및 입찰 제한 기간도 확대(예시: 現 2년 → 改 3년)(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 * (예시) 동시 2명 이상 사망 → 연간 3명 이상 사망하는 경우도 추가
-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대해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을 통한 제재 회피 차단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 마련(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 낙찰자 선정 시 안전 평가 강화

- 시설공사, 물품, 용역 등 공공조달 소 분야의 낙찰자 결정 시 중대재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평가 강화

[분야별 낙찰자 평가 강화]

구 분		현행	개선
시 설 공 사	적격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안전 평가 가점제 운영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재해 위반’ 항목 신설
	종합심사·사전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안전 항목 배점제 전환 ■ ‘중대재해 위반’ 항목 신설
물 품 용 역	적격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관련 심사 항목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용역 신인도 심사 항목에 ‘중대재해’ 감점 신설
	다수공급자계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으로 안전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성평가 결격사유에 ‘중대재해’ 신설
	기술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능력 등 심사평가 시 건설 사업 부실 별점(안전 관리 소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능력 등 심사평가 시 건설사업 부실별점 적용 강화
	우수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관련 신인도 감점 운영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 시 신인도 심사항목에 ‘중대재해’ 감점 신설

- 민자 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現 10점)을 상향하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시 감점 기준 명확화(민간투자 사업자 선정 관련 기준)
 - * 민자사업의 안전 규정 구체화를 위해 민간투자법령 개정(국가계약법령 개정 내용 준용)

2. 여신심사, 자본시장 평가 등에 반영

①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

- 대출금리·한도·보험료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권 신용평가 기준, 대출 약정 등 개선
- HUG^{HUG}분양보증(의무), HUG·HF^{HUG·HF}PF 대출보증 취급 시 안전도 평가 도입 등 심사 강화(감점 신설 등)
 -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정지 부과 시 선분양 제한 적용, 선분양 제한 기간 및 분양 시점 등 기준 강화 검토
 - 미분양 직접 매입(LH), 미분양 안심환매 지원(HUG) 시 중대재해 유발업체 등에 대한 심사 강화
- 중대재해 반복 발생 시 정책자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참여 제한

② 투자 판단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평가 등에 반영

- 상장회사가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 시 관련 사실을 지체없이 공시하도록 의무화(비상장 회사는 모회사가 공시)*
 - * 공시 위반 시 벌점 부과 및 벌점 크기에 따라 제재금·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지정 등 조치 가능
- 중대재해 관련 사실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고려될 수 있도록 ESG 평가, 스투어드십코드*에 반영
 - *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감 있게 관리·운용하기 위해 이행하는 원칙

국민연금	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평가지표에 중대재해 관련 지표 추가 (現 산재다발사업장 지정 → 改 사망자 2명 이상, 중대 산업사고 발생, 은폐·미보고 추가) ■ 사건 발생 시 ESG 평가점수 감점 비율 상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평가기관 가이드선스, 스투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 개정 → 중대재해 내용을 반영하도록 근거 명확화

- 중대재해 다발기업에 대해 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투자 제한*
 - * 신규 투자 제한, 재해 반복 발생 시 점진적 투자금 회수 등 발생빈도에 따라 제재 가중

❖ 통일된 기준(제재 대상, 시점) 및 사업장 정보 공유 체계 구축(법적 근거 마련)

3. 사고 조사·수사 강화

① 안전·보건 조치 의무 준수 촉진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 명령 제도 신설(산업안전보건법)
 - * (예시) ①사망에 이르지 않지만, 의식불명,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②사업장 내·외 중대산업사고 우려, ③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산업재해 발생 급박한 위험 등
- 유해·위험성이 높은 기계·원재료, 건설물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미비 시 적극적 시정조치 명령
 - 시정조치 미이행 시 사법처리 + 해당 기계·설비 관련 작업중지
-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일반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적발한 경우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집행(10.1~)
 - 과태료 위반행위도 법정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상향 및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신설 (양형위원회와 협의 추진)

② 유관기관 협업으로 신속·엄정 수사

- 노동부-대검찰청 간 협의체 구성 등 관계 부처 협업 강화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신속하게 송치·기소
 - 대검찰청·노동부 정기 수사 상황 점검 회의, 대형사고 발생 시 노동부-검찰청(관할지역) 수사협의회, 노동부·경찰 합동 압수수색(검찰 조율)
-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하에서 재해 반복 사업장 등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시 불법과건 여부도 점검 병행, 엄정 처리
- 노동부전담 수사조직(現 13개과 2팀) 확충·본부-지방관서 수사 전담팀 운영
 - 검찰중대재해 사건 부장검사 책임 수사제 시행, 경찰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전국 17개 시·도 경찰청) 신설
- 초동수사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엄정 대응 기조 확립
 - * (초동수사) 현장 감식에 전담 검사 직접 참여, 수사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 (보완수사) 실질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철저 규명 → (공판) 현장검증 적극 신청, 중대재해처벌법 구형 기준 준수

V. 향후 계획

- ❖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신속 추진, 집행 체계 혁신을 통한 기능·역할 강화,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산재예방 5개년 계획*」 마련
 - ▲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 ▲ 새로운 위험요인 대비, ▲ 노사의 책임 강화, ▲ 업종별 특화 대책 마련 등

□ 대책 이행

- (입법) 법 개정안은 조속히 마련하여 당정 협의 후 연내 입법 추진, 하위법령 개정사항은 연내 개정 완료 목표로 개정 절차 즉시 착수
 - * (입법 사항) 8개 부처(노동부·국토부 등) 12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 (예산)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6년 예산 및 앞으로도 지속 반영되도록 재정 당국·국회와 긴밀하게 협의
 - * ('26년 안) 2조 722억 원(노동부, 중기부, 국토부, 산업부 등)
- (이행 상황 점검) 안전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부처, 노사 및 유관단체 등과 간담회·현장 방문 등 소통 강화

□ 추진체계 구축

- 산재예방대책의 일관성·지속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가칭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 설치·운영(산업안전보건법)
 - * 구성(안): 노사정 및 전문가 포함 15인 내외로 구성
- 민관 합동으로 산재예방을 위한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실태 상시 모니터링, 산재예방 관리·연구 등 수행
 - * ▲ 일터 안전 혁신, ▲ 노동자 참여 및 책임, ▲ 노·사의 역할과 협력체계 재정립, ▲ 중앙-지방정부의 협업을 통한 감독 강화, ▲ 현행 안전보건 관련 법 체계·제도 분석 등
- 감독·관리 역량을 높이고, 중앙·지방자치단체·민간 등 전달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협력, 범정부 협업과 총괄조정 기능 강화

- ❖ '노사정 대표자 회의' 개최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 5개년 계획 수립 등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 일터 본격 추진

붙임 1

향후 추진 일정

추진 과제	담당부처	일정
I.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1.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 확대		
①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현장 수요 중심으로 재정 지원 개편		
① 10인 미만 사업장 3대 사고 예방 지원 대폭 확대	노동부	'25.下~
② 안전관리 수준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기술지원과 연계	노동부	'25.下~
③ 소규모 사업장 지원 규모 및 자율품목 확대	노동부	'25.下~
④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노동부·중기부	'25.下~
⑤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실제 필요로 하는 안전시설·장비 지원	노동부	'25.下~
② AI 기술을 산업안전 분야에 적극 도입		
① 타부처 협업 R&D로 안전분야 기술·제품 개발	노동부·중기부· 산업부·국토부· 과기부	'25.下~
②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제품 재정지원 연계	노동부	'25.下~
③ 위험요소 식별 및 개선 사항 제시 AI 도구 개발	노동부	'26.~
④ AI·디지털 트윈 기반 안전관리 서비스 실증 지원	과기부	'26.~
⑤ 첨단기술을 활용한 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	산업부	'26.~
③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기술 지원		
①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요건 강화	노동부	'26.~
②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부담 경감 지원 방안 신설	노동부	'26.~
③ 공동안전관리자 채용 확대 및 현장 지원 강화	노동부	'26.~
④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신규 운영으로 역량 강화 지원	노동부	'26.~
⑤ 중상해 재해에 대한 기술지원 도입	노동부	'26.~
⑥ 고위험 사업장 대상 이행 점검 확대, 재정지원과 연계	노동부	'25.下~
④ 안전 의식 생활화를 위한 안전보건 교육 확대·지원		
① 생명안전 인지도·감수성 제고를 위한 대상별 안전 교육 확대	노동부·중기부· 행안부·인혁처	'25.下~
② 위험상황, 작업공정 재현 VR 교육자료, 동영상 배포	노동부	'25.下~
③ 체험교육 인센티브 확대, 공공 안전체험 교육장 건립	노동부·행안부	'26.~

추진 과제	담당부처	일정
5]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① 안전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기재부	'26.~
② 산재예방 우수 기업 발굴·선정으로 모범 사례 확산	노동부·행안부 등	'25.下~

2.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 집중 지원

1]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한 강화 + 외국인 안전리더 확산

①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고용 제한 요건 강화	노동부	'26.~
② 건설업 고용 제한 단위를 사업주로 확대	노동부	'26.~
③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등을 통한 외국인 안전리더 확산	노동부	'25.下~
④ 외국인 안전리더 활용 기업 인센티브 부여 및 수당 지급	노동부	'26.~
⑤ 농촌 중심 주거환경 시설 정비 및 숙소지원 확대	노동부·농식품부	'26.~
⑥ 현장 여건을 고려한 훈련 과정 신설	노동부	'26.~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의 보호 범위 확대+교통사고 예방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및 적용 규정 확대	노동부·국토부	'26.~
② 안전조치 준수 점검 확대, 안전 문화 캠페인 지원	노동부·행안부·경찰청	'26.~
③ 고위험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도입	노동부	'27.下~
④ 배달종사자 유상운송보험 가입, 안전교육 의무화	노동부·국토부	'26.~

3] 고령노동자: 특화 작업환경 개선, 교육·건강관리 강화

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개선 비용 지원	노동부	'25.下~
② 고령노동자 작업관리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노동부	'25.下~
③ 고령노동자 특화 콘텐츠 개발·보급, 안전교육 실시	노동부	'26.~
④ 고령자 심층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지원	노동부	'26.~

3. 지방자치단체·민간과 함께 촘촘한 예방시스템 구축

1] 중앙정부: 고위험 사업장 점검·감독 확대

① 감독관 증원과 연계 감독 물량 확대	노동부	'26.~
② 불시 패트롤 점검 신설, 안전일터 신고센터 연계	노동부	'25.下~
③ 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 감독으로 구조적 문제 파악·개선	노동부	'25.下~

추진 과제	담당부처	일정
2 지방자치단체: 30인 미만 점검·감독+지역 특화 예방 활동		
① 감독권한 위임,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점검·감독 추진	노동부	'26.~
②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 사업을 기획·운영토록 사업 신설	노동부	'26.~
③ 중앙-지방 안전 네트워크 구축으로 개별 관리 강화	노동부·행안부	'26.~

3 민간: 영세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상시 순찰		
① 안전지킴이 영세사업장 집중 투입	노동부	'26.~
②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집중 지도·관리 강화	노동부	'25.下~
③ 지방관서-안전협회-보건협회 간 협조 체계 구축·운영	노동부	'25.下~

Ⅱ. 안전 주체로서 노사의 역할·책무 확립

1. 도급 계약 시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 강화

1 안전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적정 비용 보장		
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 부여	국토부	'26.~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원청 및 업종 확대	노동부	'26.~
③ 산업안전비용 전가 부당특약 점검 및 과징금 부과수준 상향	노동부·공정위	'26.~

2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공사기간 부여		
① 민간공사 계약 단계부터 적정 공사기간 확보 유도	국토부	'26.~
② 건설 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폭염 등 기상재해 추가	노동부	'26.~

2. 공공기관이 안전에 선도적 역할

1 인력·투자 확대 등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성 강화		
① 중대재해 발생 책임 기관장 해임 법적 근거 마련	기재부	'26.~
② 2인 1조 작업, 신규자 단독 금지작업 운영 실태조사	기재부	'25.下~
③ 투자 계획, 기관별 안전 투자 실적 주기적 점검·관리	기재부	'25.下~
④ 기관장·경영진, 사업주, 근로자 등 안전교육 강화	기재부	'25.下~

추진 과제	담당부처	일정
② 공공기관 및 수급업체 포함 안전 관리 평가		
① 공공기관 경영평가 안전 관련 항목 반영 및 배점 상향	기재부	'25.下~
② 공공부문부터 평가 지표에 수급업체 안전 관리 수준 반영	기재부·행안부	'25.下~
③ 안전활동 수준평가 중대재해 반영, 근로자 면담 신설	노동부	'25.下~
④ 지방공기업 안전활동 수준평가 도입·확대	행안부·노동부	'26.~

3. 안전 관리를 위한 구조 개선

① 불법하도급 방지 등 하도급 구조 개선		
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정례화	노동부·국토부	'25.下~
② 불법하도급에 따른 제재 수준 및 사유 등 확대	국토부	'26.~
③ 공공기관 하도급 실태조사	관계부처 합동	'26.~
④ 질식 위험 업무 하도급 규정 정비	노동부·기재부·행안부	'25.下~

② 적격 수급인 선정 등 주체별 안전 관리 강화		
① 적격 수급인을 선정·계약토록 의무 내용·절차 명확화	노동부	'26.~
② 적격수급인 선정 가이드 개정·보완	노동부	'25.下~
③ 건설공사 주체별 안전관리 강화	노동부·국토부	'26.~

4. 산재예방주체로서 노동자 권리 보장

① 알 권리: 정보 공개 확대 및 위험성평가 개선		
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노동부	'25.下~
②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 정기적 공개 방안 마련	노동부	'25.下~
③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으로 안전보건 정보 공개 확대	노동부	'26.~
④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 수 공시 주기 확대	기재부	'26.~
⑤ 중대재해 다발 업종 표준모델, 고위험요인 자료 보급	노동부	'25.下~
⑥ 위험성평가 미실시 벌칙 적용, 노동자대표 참여 보장	노동부	'26.~

추진 과제	담당부처	일정
2 참여 권리: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 및 노동자대표 권한 강화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원하청 노사 참여 확대	노동부	'26.~
② 건설업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의무 범위 확대	노동부	'26.~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및 교육 훈련 지원	노동부	'26.~
3 피할 권리: 작업중지권 확대 및 실질적 보장		
① 노동자의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 요구 권리 신설	노동부	'26.~
②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 시 불리한 처우 방지	노동부	'26.~
Ⅲ. 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		
1. 산업안전감독관 대폭 확충		
1 지방자치단체 권한 위임 및 인력 확충		
①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 부여 및 협업 강화	노동부	'26.~
② 산업안전감독관 확충	노동부	'26.~
2 감독관 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형 교육 및 보직 관리		
①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술직군 채용 확대	노동부	'26.~
② 현장 중심의 체험·실습형 교육 강화	노동부	'26.~
2.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민간의 전문성 제고		
1 안전·보건관리자 전문성 제고		
① 현장 경력 정보 체계적 관리	노동부	'26.~
②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업종별 특화교육 운영	노동부	'26.~
2 민간 재해예방기관 역량 강화		
① 우수 민간재해예방기관 육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	노동부	'26.~
②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체계 고도화	노동부	'26.~
3 건설인 기능인 등급제를 통한 숙련 기능인 양성		
① 기능인 등급제 활성화, 청년 유입 유도	국토부	'26.~

추진 과제	담당부처	일정
-------	------	----

3. 안전 의식·문화 확산

① 대국민 직접 위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① 온라인·모바일 기반 안전 일터 신고센터 개설·운영	노동부	'25.9월~
② 산재 발생 위험 등 적발·신고 시 포상금 지급	노동부	'26.~

② 안전 의식 확산을 위한 민관 협업

① 자발적인 안전 투자 확대 및 안전 확보 노력 촉구	노동부·산업부	'25.下~
② 안전문화 협의체를 통한 지역 맞춤형 안전문화 활동	노동부	'26.~
③ 대국민 안전 인식 확산을 위한 공익광고 추진	노동부	'25.下~

IV.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제재 수단 도입

1. 신속·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 부과

① 중대재해 반복 발생 시 금전적 제재 및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①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과징금 도입	노동부	'26.~
②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 확대	노동부	'26.~
③ 전기공사 등 영업정지 요청 대상 공사 확대	노동부·산업부· 과기부·소방청, 국가유산청	'26.~
④ 사망자 수에 따라 건설사 영업정지 수준 강화	국토부	'26.~
⑤ 영업정지 반복 건설사 등록말소 요청 규정 신설	노동부·국토부	'26.~
⑥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	소관부처· 법제처	'26.~

②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 공공입찰 제한 강화

① 공공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확대	기재부·행안부	'26.~
② 공공입찰 참가 제한 요건·기간 확대	기재부·행안부	'26.~
③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 효력 승계 규정 마련	기재부·행안부	'26.~
④ 공공조달 낙찰자 중대재해 발생 여부 평가 강화	기재부·조달청· 행안부	'25.下~
⑤ 민자사업 낙찰자 건설안전 평가 배점 상향, 감점기준 명확화	기재부	'25.下~

추진 과제	담당부처	일정
-------	------	----

2. 여신심사, 자본시장 평가 등에 반영

①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

① 금융권 신용평가 기준, 대출 약정 등 개선	금융위·노동부	'25.下~
② 분양보증, PF 대출보증 취급 시 심사 강화	금융위·국토부	'26.~
③ 중대재해 유발 업체 분양 과정에서 패널티 부여	국토부	'26.~
④ 중대재해 발생 시 정책자금 지원 제재 강화	중기부 등	'25.下~

② 투자 판단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평가 등에 반영

① 상장회사의 중대재해 발생 등 공시 의무화	금융위	'25.下~
② 중대재해 관련 사실 ESG 평가, 스튜어드십코드에 반영	금융위·복지부	'25.下~
③ 중대재해 다발기업 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투자 제한	노동부	'26.~

3. 사고 조사·수사 강화

① 안전·보건 조치 의무 준수 촉진

①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 명령 제도 신설	노동부	'25.下~
② 안전보건조치 미비 시 적극적 시정조치 명령 활성화	노동부	'25.下~
③ 일반감독 시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조치	노동부	'25.下~
④ 산안법 양형기준 상향, 중처법 양형기준 신설	법무부·노동부	'25.下~

② 유관기관 협업으로 신속·엄정 수사

① 노동부-대검찰청 협의체 구성 등 협업 강화	노동부·법무부	'25.下~
② 다단계 하도급 재해 반복 사업장 불법파견 여부 점검 병행	노동부·법무부	'25.下~
③ 전담 수사조직 확충, 중대재해 사건 부장검사 책임 수사제	노동부·법무부· 경찰청	'25.下~
④ 초동수사부터 공판까지 엄정 대응 기조 확립	법무부	'25.下~

붙임 2

입법과제 목록 [8개 부처 12개 법률]

	대책 주요 내용	관련부처	개정 법률
① 지원 예방	▶ 택배업 위탁 표준계약서 주요 사항 반영 의무화	국토부	생활물류서비스법
	▶ 야간작업 고위험군(택배 등) 건강진단 신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 배달종사자 유상운송보험 가입 등 사회안전망 조치 강화	국토부	생활물류서비스법
② 노사의 역할· 책무 강화	▶ 발주자(공공·민간)에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 부여	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안전특별법 ^{개정}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주체 확대(원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 발주자의 적정 공기 산정, 전문·인허가기관 장의 심의·검토	국토부	건설안전특별법 ^{개정}
	▶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 추가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 있는 기관장 해임 근거 마련	기재부	공공기관운영법
	▶ 불법하도급에 따른 제재 수준 및 사유 확대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한 의무 내용·절차 명확화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공사 발주자·설계자·감리자 책임 신설	노동부, 국토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안전특별법 ^{개정}
	▶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 위험성평가에 노동자대표 참여, 미실시에 대한 제재 신설 등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 명예감독관 위촉 의무화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 노동자·명예감독관의 작업중지·시정조치 요구권 신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 노동자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 및 불리한 처우 금지 등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③ 실효적 제재	▶ 사망사고 다수 발생 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 도입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 영업정지 대상 확대 및 등록말소 요청 규정 신설	노동부 국토부 산업부 과기부 소방청 국가유산청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법
	▶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 공공입찰 참가 제한	기재부, 행안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④ 안전의식	▶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 제도 신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 [싱가포르] 강력한 처벌·제재와 기업 인센티브 병행

- 산재 감축 및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확립을 위한 범국가적 전략 (WSH 2015, 2018, 2028) 추진 → 산재사망자 수 대폭 감소
 - * (10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 이하 동일) '04. 4.9명 → '23. 0.99명 (영국0.4명, 일본1.5명, 한국4.2명)
- ① 벌금 상한액 인상, 수주제한 및 입찰 불이익 등 강력한 처벌·제재, 입찰가점, 우수기업 포상 등 기업 지원
- ②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등 노동자 참여 보장으로 사고예방 주체의식 내재화 추진
- 정책의 실행력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권한 있는 노사정 산업 안전보건전담기구(WSH Council) 설치·운영

□ [일본] 취약계층 지원 및 업종·사고유형별 예방 가이드라인 제공

- 제14차 노동재해방지계획('23~'27)을 통해 중대재해 감소 추진
 - ① 언어 배려 안전교육, 전도·넘어짐 예방조치 확산 등 외국인·고령자 특화 지원으로 노동시장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 ② 업종·사고유형별(건설업 추락, 제조업 끼임, 임업 벌목) 가이드라인 제공
 - ③ 안전보건체계가 기업에 비용이 아닌 경쟁력이라는 인식 확산을 위해 민관 공동 캠페인 및 정책적·경제적 지원 병행 추진
- 지역별 행정조직에서 지역 산재특성에 적합한 집중 감독·점검* 실시
 - * ▲건설업(추락·전도), ▲운송업(교통사고), ▲제조업(협착·끼임)

→ (싱가포르) 처벌·제재를 강화하여 사고에 따른 대가를 높이고, 우수 기업 포상 및 노동자 참여 보장

→ (일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령자·외국인 노동자 및 업종·지역별 특화 예방대책 강화